

새로운 成長動因 창출을 위한 산업기술정책 방향

김 종 갑 |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국, 국장

뉴밀레니엄에 대한 희망과 기대로 시작한 2000년도 어느덧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IMF의 후유증과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안겨준 경제적 충격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21세기의 희망찬 새 역사를 창조하며, 위대한 한반도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우리 경제를 하루빨리 재도약시켜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미국경제의 둔화, 반도체가격의 하락 등으로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도 금융불안, 내수둔화 등으로 경제심리가 위축되는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경제의 나아갈 방향은 명확합니다.

산업기술 혁신을 통한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학·관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기술혁신 중심의 구조개혁과 시장실패의 보완 및 시장의 성공을 도모하는 적극적 산업기술혁신정책, 기술혁신을 중심으로 금융, 산업, 통상, 무역 등 관련 정책을 연결하는 산업기술혁신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선택과 집중'에 의한 기술·정보위주의 '질적 성장체제'로 전환할 것입니다.

산업혁명을 주도한 영국과 신대륙을 개척한 미국이 100년 이상 국가경쟁력을 선점하여 세계경제를 주도한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기술혁명시대의 도래에 따라 향후 3년간 새로운 기술력의 확보는 향후 100년간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것입니다. 이제는 부실기업 처리를 위한 소극적 구조조정에서 나아가 새로운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중심의 적극적 구조조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21세기 대전환기를 활용하여 안으로는 지식·기술 기반경제의 기틀을 마련하고 밖으로는 남북협력과 동북아 경제권 형성으로 '한민족 융비의 시대' 개막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기업들이 이제는 선진

국의 추종(catch-up)에서 벗어나 정보통신과 벤처기업을 기반으로 선진국과 실시간(real-time)으로 경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에 따라 남북 경제관계가 단순한 외생적 변수에서 내생적 변수로 전환되었으며, 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EU, NAFTA와 함께 동북아 경제권이 세계경제의 핵심동인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인 요소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물경제의 시련과 도전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승화시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산업기술 혁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기술혁신을 위해서는 전략적 기술개발체제를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주요 산업별로 기술기획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기술동향을 파악하고 산업기술지도(Industrial Technology Roadmap)를 작성하여 중점 기술개발과제를 발굴하는 등 기술기획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기술개발의 단계별, 프로그램별 평가방식을 다양화하고 책임성을 강화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체제를 확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학·연구소와 기업이 공동으로 산업기초 기술에서 사업화까지 일괄 개발할 수 있도록 산업기초기술개발사업을 도입하고 책임성 강화를 통한 성공률 제고를 위해 기술개발사업의 주체를 교수와 연구원 개인으로 지정하는 기술개발실명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서 지난 4월에 기술거래소를 설립하고 6월에는 '기술이전촉진법시행령'을 제정함으로써 기술시장을 형성한 바 있습니다. 향후 기술혁신에 기여한 근로자와 연구자에 대한 성과보상을 제도화하고 특허기술장터(IP-Mart)를 개설함으

로써 기술시장을 더욱 더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기술혁신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기술혁신시스템(NIS)을 튼튼하게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역 및 국제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둘 것입니다.

먼저 지역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광주·전남, 경북, 충남, 안산, 송도, 대구 등 6 개 테크노파크를 본격 가동하는 한편 포항, 부산 등 민간중심의 테크노파크 설립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테크노파크(TP)를 전국적인 지역기술혁신거점으로 중점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광주 光산업, 대구 섬유산업, 경남 기계산업, 부산 신발산업 등 기술력 위주의 지방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기술개발, 기술 인프라 구축을 집중 지원하고 지역기술혁신센터(TIC)를 지방 배후산업 발전의 전초기지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국제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국제 지능형생산시스템(IMS) 공동연구사업 등 국제공동연구개발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독일, 이스라엘, 영국 등 기술 선진국의 주요 연구소 및 대학 등과의 공동기술개발사업을 확대하는 등 전략적인 국제기술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동북아 기술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산업기술 인프라를 튼튼하게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e-비즈니스 인력을 중심으로 외국 인력에 대한 출입국 및 취업허가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골드카드제를 도입하고 국제산업디자인대학원, 산업기술대학, 경기공업전문대 등 산업현장 기술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기업수요에 부응하는 기술인력 양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업기술지역정보화사업과 Inno-Net사업을 통합하여 중소기업을 위한 종합적인 산업·지역 정보 유통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원활한 기술정보유통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한편 국가표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국가표준체계를 확립하고 민간주도 표준체계 확립 및 표준화 기술개발활동을 본격화하며, 주요 국가와의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하여 기술무역장벽을 해소함으로써

표준이 산업 및 수출의 견실한 기술적 뿌리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한회사를 기술력 위주의 중소·벤처기업이나 지식기반산업의 대표적 기업조직으로 활성화하고 기술중심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분사화를 촉진하며 기술개발단계의 세제를 기술혁신촉진형으로 전환하는 등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디자인산업, 전자상거래, 부품·소재산업 등 핵심산업의 기술력 제고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디지털 환경에 맞는 디자인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경쟁력 있는 디자인 벤처기업을 육성하며, 디자인 및 브랜드 육성과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우리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수출 확대를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핵심산업의 전자상거래망 구축을 통해 우리 산업을 Network형 산업구조로 전환하여 산업 효율성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 전자상거래 요소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IT산업 발전과 기존 제조업의 IT화에 따른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부품·소재 산업에 신뢰성보험을 도입하여 시장진입 애로를 해결하는 등 부품·소재의 국산화를 적극 추진하고 부품·소재 전문기업의 기술개발을 투자기관과 공동지원함으로써 부품·소재산업을 수입대체산업에서 전략적 수출산업으로 적극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부품·소재 육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가칭 '부품·소재 산업발전특별법'의 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생물전문벤처펀드를 조성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생물산업의 발전 여건을 조성하고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 설립 및 안전성평가센터 확충, 생물산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생물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정부는 위에서 말씀드린 산업기술드라이브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작은 나라이지만 큰 기술을 보유한 21세기 산업기술 강국 건설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입니다.